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www.emerics.org/ 2019. 04. 25. 아프리카·중동	「동향세미나」 미,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작성 장윤희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	--

- 2019년 4월 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함.
- 미국이 다른 국가의 군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한 것은 처음으로, 미국은 혁명수비대가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설 이후 40년간 테러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지적함.¹⁾
 - FTO에는 알카이다(al-Qa'ida), 헤즈볼라(Hezbollah) 등을 포함한 67개 조직이 지정되어 있으며 4월 15일부터 혁명수비대도 명단에 추가됨.
 - 또한 미국은 이란 정부의 테러 지원에 대해 향후 최대의 압박을 가할 것을 시사함.
 - 미국은 이란 정부가 중동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테러 자금을 지원하고 폭력 사태 및 불안을 고조시켰다고 밝힘.
 - 이에 대응해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는 중동에 주둔한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였으며 미국을 테러지원국이라 칭하는 등 양국간 대립이 격화됨.
- 미국은 이란 내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혁명수비대 제재를 통해 이란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였으며 11월까지 그동안 완화되었던 대이란 제재를 모두 복원함.
 - 혁명수비대는 석유·가스 산업, 석유화학, 자동차, 항공, 건설, 금융 등 산업 전반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란 경제의 20~40%를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됨.²⁾
 - 다수 혁명수비대 출신 인사들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도 크며 혁명수비대는 이란 사회 통치 엘리트로 권력을 행사함.
 - 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가 이미 다수 행정명령과 법에 의해 부과되어 FTO 지정의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강경 태세 강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 일각에서는 이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 기조 속 이란 경제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이번

1)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Release: April 2019, Designation of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2) Ottolenghi, Emanuele, Saeed Ghasseminejad, Annie Fixler, Amir Toumaj(2016), How the Nuclear Deal Enriches Iran's Revolutionary Guard Corps, p. 11.

- 조치가 미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제재 복원 이후 이란 원유 생산 및 수출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함.
 - 이란의 원유 및 콘덴세이트 선적 규모는 2019년 3월 기준 일일 140만 배럴로 2018년 5월 대비 50% 감소함.³⁾
 -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정책을 추진해 온 루하니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고 강경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의 대이란 진출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3월 루하니 대통령은 국영 세바(Sepah)은행과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5개 은행을 통합하는 등 경제 부문에서 혁명수비대 세력의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임.
 - 미국의 경우 이번 조치로 중동 내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공격 위협이 높아질 수 있음.
 - 미-이란간 정면 대결보다는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이 미군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국의 협력국이면서 이란의 영향력이 큰 이라크, 레바논 등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
 - 미국의 군대, 외교관 등이 혁명수비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라크, 레바논 당국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함.
 - 한편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며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한국의 원유 도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2018년 11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일본 등 8개국에 대해 180일간 제재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5월 2일 이후 한시적 제재 예외가 종료될 예정임.
 - 한국은 원유 수입처 다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란산 콘덴세이트 수요가 높은 석유화학 부문의 비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l Jazeera, CNBC, Independent, Bloomberg 등〉

3) IEA(2019), Oil Market Report April, p. 17.